

■ 청문회 핫코너

“盧차명계좌 실체 못밝히면 구속수사 해야”

“盧 前대통령 묘소에 무릎 꿇겠다”

“조현오 盧前대통령 은혜 원수로 갚아” “이재오 병역·학력 허위 기재 등 의혹” “진수희 동생 은평뉴타운 사업 특혜”

조현오 내정자 “死者 명예훼손 판결땀 사퇴”

국회는 23일 상임위 별도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재오 특임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진수희 보건복지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등 8·8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자 10명 가운데 5명의 청문회를 열어 강도 높은 인사 검증을 실시했다.

여야는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 결과가 향후 정국 주도권을 좌우하고, 민심의 한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 이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야당의 공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와 ‘천안함 유가족 비하’ 발언 논란을 일으킨 조현오 내정자와 현 정부의 ‘핵심 실세’로 꼽히는 이재오 내정자에게 집중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의 조 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대로 조 내정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중심으로 치안총수로서의 자질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내정자는 노무현 정권에서 오늘날 출세할 수 있는 대답을 마련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며 “대통령은 경찰청장 지명을 철회하고 서울청장에서 파면, 구속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도 “필요하면 스스로 신중할 결단을 내려달라”(서병수 의원), “물증 없이 발언했다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유정현 의원)며 차명계좌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다.

청문회에서는 2007년 경찰청 경비국장 제임시 모친상 조의금으로 1억7000여만원을 받는 등 재산형성을 둘러싼 의혹, 부인과 딸의 위장전입 문제, 인사청탁 논란, 조폭과의 연루설 등도 거론됐다.

“정권 2인자”로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각종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 내정자의 병역·학력 허위 기재 의혹,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비의 의혹을 비롯해 불법 정치후원금 제공에 연루 의혹 등도 제기됐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의 정치공세라며 이 내정자

를 적극 옹호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내정자가 미국에 체류한 10개월간 한 달에 생활비로 300달러를 썼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는다. 식비로 1년에 293달러를 썼다면 햄버거도 못 사먹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측근 3명이 대우조선해양의 고문으로 일제히 들어간 것은 남상태 사장 연임을 보장해주고 이를 연결고리로 비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는 학력·병역 의혹과 관련, “현재 학제로 보면 의혹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사실이다. 60년대엔 그게 묵인됐다”면서 “45년이 지난 지금의 눈으로 잣대를 갖고 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 점도 있는 게 사실인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주호 내정자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은 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에 집중했지만 민주당은 이 내정자의 논문 이중계좌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자질을 문제 삼았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유정복 내정자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쌀값 대책,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농협 구조조정 방안 등을 질문하면서 유 내정자의 전문성을 살폈다. 유 내정자 자녀의 증여세 미납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의 진수희 내정자 청문회에서 미국 국적자인 그의 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점과 진 내정자 동생의 조경회사가 은평뉴타운 등에서 대형 공사를 수주한 배경이 집중 추궁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진 내정자의 딸은 2003년 5월 한국국적을 포기했으나 2004~2006년 7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건보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진 내정자는 올해 1월 동생이 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경회회를 위해 조경기법반을 공동발의했고, 2008년엔 조경회회가 주최하는 신년교례회에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가 참여해 추사를 했다”며 “이후 진 내정자 동생의 조경회사가 은평뉴타운 사업에 잇따라 참여했다”며 특혜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가 2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2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대통령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 만들라”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 “조금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인사 추천을 그때 그때 기준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평가한 뒤 추

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부 인사의 흠결이 드러나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부족한 점이 발견된 데 대해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문

제가 지적된 후보자들의 거취와는 전혀 무관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안건은 미리 청와대, 정부, 당과 국회가 협의해서 차질없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논란과 관련, 노 전 대통령의 묘소 앞에서 사죄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내정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노 전 대통령 묘소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할 의사가 있느냐”는 민주당 최규식 의원의 질문에 “그럴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차명계좌 발언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어떤 태도로 임하겠느냐”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질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유족들 이해를 구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해 구하기가) 제대로 안 돼 검찰 수사로 가게 되면 성실하게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이 유죄로 판결되면 경찰청장을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조 내정자는 이어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에 “경찰 지휘요원들을 상대로 얘기한 게 이렇게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제

가 더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천안함 유족에게는 사과를 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언급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유정현 의원은 채수찬 전 서울 강북구청의 ‘항명사태’와 관련, “성과주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와 함께 조 내정자의 ‘조폭과의 연루설’과 실직주의 부작용, 모친상 조의금을 비롯한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집중 거론하면서 화력을 집중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강남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조직폭력배 출신이 조 내정자와 친분을 과시한다는 첩보를 서울경찰청 수사2계에서 지난 3월 입수, 내사를 벌였다고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종결했다”면서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충조 의원은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도 강경 일본도로 대처하는 등 경찰총수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선진국 되려면 권력 분산돼야”

이재오 내정자 “남북관계 특별 임무 맡을 것”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는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혁의 방향과 관련 “권력이 분산돼야 한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이날 정치인으로서 개혁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대해 “4선을 해오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가 청렴해야 한다고 봤다. 권력이 한쪽에 집중돼 예산과 인사가 집중되면 자연적으로 갈등이 많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내정자는 또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기 어려운 남북문제를 풀기 위해 역대 정권에서는 특임장관이 비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 그런 역할이 주어지면 맡을 의사가 있느냐”라는 질의에 대해 “남북관계는 정상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특별한 사안

에 대해 특별한 임무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한 쌀 지원 여부와 관련, “추석도 가까워 온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쌀 지원문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신의주에 물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생각해야 한다. 인도적·정치적 차원은 구분해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대권행보에 나서면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언급과 관련, “김 지사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 누구라도 대선 후보가 되면 제가 후보가 되지 않는 한 적극 지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본인이 대권에 뜻이 있는지는 “전 생각을 안 해봤고, 한나라당 후보가 (누가) 되면 적극 지지해야죠”라고 부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문화관광
10월 9일 ~ 11월 6일
무안 ↔ 소림사 직항 전세기
02-226-8070
광주 문화관광 진흥기 사무실